

데스크 시국



박치경 편집국장·사회부장

전두환 전 대통령 집과 장남 사무실에 대한 검찰 수색을 TV에서 지켜보는 마음은 착잡했다. 곳곳에서 고가의 미술품과 함께 활동불상까지 쏟아져 나오는 장면은 경악에 가까웠다.

대한민국은 원시 부족국가?

아무리 생각해도 전씨 일가의 행동은 정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과 가족이 무엇이 부족해 보관하기에도 버거운 만큼의 작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았던 말인가? 1주일 동안이나 이어진 검찰의 압수수색은 마치 금은보화가 가득한 ‘추장(酋長)의 집을 뒤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은펜칼럼



김병인 서영대학교 교수

남북이 7월 22일 열린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5차 실무회담에서도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오는 25일 개성공단에서 6차 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공단 가동 중단 재발방지 문제, 신변 안전 및 투자자산 보호 등 제도적 보호 장치, 외국 기업 유지 등 개성공단 국제화, 공단 재가동 문제 등 4가지 주요 조정사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고



문기식 광주소방안전본부 구조구급과장

수은주가 연일 치솟으며, 폭염주의보가 그칠 날이 없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고온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우주연구소 소장인 제임스 헨슨 박사는 2012년 워싱턴 포스트지 기고문에서 점점 뜨거워지는 여름은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 때문이며, 상황은 20년 전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악화됐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올라가면서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지

‘추장’(酋長), 그리고 전두환

‘원시사회에서 생활공동체를 통솔하고 대표하던 우두머리’. 추장의 사전적 의미다. 부족민의 안위와 생명을 지켜주는 대신, 생사여탈권을 비롯한 모든 것을 갖는 추장. 전씨의 처부는 미개한 종족(種族)사회 추장의 행동과 닮아 보였다.

재임시절 재벌 등으로부터 통치자금이라며 1조 원에 가까운 비자금을 걷었던 전씨가 아직 내지 않고 있는 추정금은 1672억원. 월급 300만 원짜리 회사원이 4644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천문학적인 액수다. 검찰은 전씨 일가가 검은 돈을 고가의 미술품 구입 등에 사용했다는 근거를 밝혀 최대한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압수수색의 중요 타깃이 된 전씨 큰 아들 재국씨는 1991년 설립한 출판사 ‘시공사’를 운영하면서 각종 의혹을 받아왔다. 아버지의 비자금이 재국씨의 사업에 직접 쓰였다는 흔적은 현재로서는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 1991년 30대 초반에 창업한 재국씨가 출판사 설립에 들어간 목돈을 어디에서 구했는지, 매년 막대한 적자를 내면서 어떻게 버텨지 운영하고 있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시공사 창고에서 압수한 미술품은 입을 벌여지게 했다. 동양화와 서양화, 서예, 족

자에 활동불상까지 수백 점이나 됐고 국내 외 유명작가 50여 명의 작품이 포함됐다. 천경자·김중하·육근병·정원철·권여현 등 국내 작가뿐 아니라 영국의 프란시스 베이컨, 이탈리아 조카가 스타치올리 등 외국 작가의 작품까지 나왔다. 전씨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작품들은 세계 유수 미술관의 소장품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다.

용기있다면 사과와 참회를

전씨가 비자금을 숨겨놓은 수법도 가관이었다. 검찰은 2004년 불법 대선자금을 추적하던 중 한 노숙자의 계좌에서 비자금의 꼬리를 잡아 74억여 원을 추징했다. 이를 지켜본 외국인들은 전두환 통치시절의 대한민국을 추장 지배 체제 정도로 비꼬지는 않았을까.

필자는 32년 전인 1981년 3월 18일 해남에서 ‘대통령 전두환’을 지근에서 목도한 적이 있다. 그해 2월 선거인단 선거를 통해 12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직후 전씨가 같은 해 3월 25일 실시되는 총선을 불과 1주일 앞두고, 지방시찰이라는 명목으로 전국을 일주하던 차에 해남에 들른 광경을 지켜본 것이다. 요즘 같으면 대통령의 정치개입으로 ‘탄핵감’이었지만 그는 전혀 거리낌없었다. 5·

18 직후라 지역여론이 극도로 나뉘던 터여서 경호원들은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주민들 곁으로 다가가 답석담석 손을 잡는 그는 무척이나 호기로웠다.(당시 전 씨의 민정당 후보는 해남·진도 선거구에서 낙선했다)

이번 자택 압수수색 때도 전씨는 지휘 검사에게 “수고한다”며 격려했다는 보도에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호기는 여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일 국민적 지탄을 받는 전씨에게 묻고 싶다. 대통령 ‘7년 단임’을 치적으로 자부하며 끝까지 호기를 부리는 그가 미납 추정금은 물론, 부당하게 모은 전 재산을 스스로 내놓고 용서를 구할 마음은 없느냐는 것이다. 더불어 광주 망월역과 5·18 민주평화광장을 찾아 본인이 자야한 눈물과 상처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는 게 진정한 용기가 아니겠느냐고?

이번 압수수색은 전씨가 생을 마감 때까지 ‘전두환 부족’의 추장(Chief)으로 살 것인지, 그나마 참회를 통해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President)으로 남고 싶은 지를 결정해야 할 기로다. 올해 만 82세로 약간의 치매가 있다는 전두환씨에게 최후 선택의 시간은 길지 않다. /unipark@kwangju.co.kr

社說

취득세율 인하, 지방세수 보전 전제돼야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침을 밝히자 광주시와 전남도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광주시와 전남도는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아 지방세의 근간인 취득세마저 인하할 경우 재정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현행 4%의 취득세율이 2%로 낮아지면 광주시는 한 해 844억 원, 전남도는 675억 원의 세수입이 줄어들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방세인 취득세율 인하를 추진하면서 지자체와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도 모자라 부족한 지방세수 보전책도 마련치 않고 있다. 지자체의 고유권한을 무시한 작태이자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지방분권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세수 보전방안도 문제가 많다. 우선 국세인 부가가치세

에서 5%를 이양하는 지방소비세율 10%로 올리는 안이 유력하지만 ‘아랫돌 빼 윗돌 끼기’여서 후유증이 예상된다. 지방소비세율을 올리면 부가가치세수가 줄어들어 지방교부금(내국세의 19.24%)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지방소득세를 인상할 경우 조세 저항에 부딪힐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도 있지만 세수가 취득세보다 낮아 현실성이 떨어진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지방간 갈등만 빚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자체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보전방안을 이끌어 내야 한다. 지방세수 감소부분은 정부가 책임지고 예산으로 보전해줘야 하며 국세의 지방 이양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여기에는 광주·전남처럼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 차등 보전도 필요하다. 재정이 취약하면 지역민의 삶의 질도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법이다.

전남지역 방학캠프도 안전지대 아니다

이번 주부터 각급 학교의 본격적인 방학으로 광주·전남지역에서도 많은 캠프가 예정돼 있지만 관련기관은 실재마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총남 태안 사설 해병대 훈련캠프에서 고교생 5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어 파장이 큰 데도 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방학 동안에는 수련시설뿐만 아니라 해변과 산악 등지에서 집중적으로 학생들의 캠프활동이 이뤄진다. 풍광이 아름답고, 넓은 바닷가가 분포하는 광주·전남에도 방학마다 지역은 물론 타지의 많은 학생이 몰려와 국토순례 등 다양한 방학캠프가 진행된다.

전남지역의 경우 모두 45곳의 지자체 소유 청소년 수련관과 야영장 등이 있지만 프로그램은 주로 시민단체에서 맡는 등 이원화돼 철저한 감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학부모들에게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일부 수련시설이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실제 진행은 계약을 맺은 관련업체가 맡고 있

어 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수련시설들이 업체에 프로그램 운영을 맡기는 바람에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 캠프에 대한 안전대책을 파악하기 어려워 사고가 발생한다면 큰 희생을 치를 수도 있다.

여기에도 종사자들이 전문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지조차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 자녀를 캠프에 보내려는 학부모들은 걱정이 앞선다. 태안사고에서도 많은 학생이 몰려와 국토순례 등 다양한 방학캠프가 진행된다.

광주시와 전남도, 교육청, 경찰 등 유관기관이 나서 방학캠프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안전대책 확보 등 가능한 조치를 서둘러 취해야 한다. 태안사고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했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면 책임과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더 이상 ‘인재(人災)’는 안 된다.

無 等 鼓

박근혜 정부에서 호남인사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새 정권 창출 직후이니만큼 눈공행상은 예견됐던 일이지만, 편중인사가 극을 치닫다 보니 호남인의 한(恨)이 밀물처럼 불어나는 느낌이다.

중국 전국시대, 식객 3000명을 거느렸던 맹상군이 제나라 왕의 신임을 잃고 재상자리에서 물러나자 그 많은 식객들은

그것은 사람들이 ‘아침’을 좋아하고 ‘저녁’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저녁이 되면 시장에는 구할 물건이 없기 때문인 이다. 굳게서 자리를 잃었을 때 사람들이 떠나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일을 가지고 발길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맹상군은 풍환에게 절하고, 선비들을 받아들였다.

풍환에게 절 한 이유



얼렁태를 꾸짖는 것은 당연한 일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렸다. 하지만, 곁에 남 아있던 풍환의 지략으로 맹상군이 다시 제나라 재상에 기용되자 떠났던 식객들이 앞다투어 되돌아왔다.

맹상군이 탄식했다. “내가 자리에서 쫓겨나자 하루아침에 다 떠나가고, 아무도 나를 돌보려 하지 않았소. 그런데 복직을 하자 저들은 다시 돌아오고 있소. 무슨 낯짝으로 나를 찾은단 말이요? 그 얼굴에 침을 빨고 육을 퍼우려 주겠소!”

그러자 풍환이 말했다. “아침에 시장에 가는 사람들을 보셨을 겁니다. 아침에는 앞다뒤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만 날이 저물면 다 떠나고 썰물해집니다.

다. 하지만, 맹상군은 찾는 모든 이들이 개인의 사소한 이익을 추구했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식객 중 일부는 분명 내로라하는 행정가, 정략가였을 것이고 자신의 학식과 경륜을 세상에 펼칠 기회를 얻기 위해 맹상군이라는 ‘실력자’

에게 의탁했을 것이다. 맹상군도 그 사실을 깨달았기에 마음을 돌렸을 게다. 호남인제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특정 지역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생각은 편견이다. 그들에게 식객과 정륜을 펼칠 기회를 주는 것, 지도자의 권한이자 책무다. /홍행기 사회1팀장 redplane@

남북관계 정상화를 바라며

양측은 외국 기업 유치 등 개성공단 국제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차가 크다고 알려졌다. 양측은 공단 투자 기업인들의 입장이나 군사 시설을 허물고 공단부지로 제공한 복측의 입장 등을 두루 고려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역사사 지하면서 또 대화를 계속해 나가면서 민족적 입장에서 최종합의에 이르기를 기대한다.

올해로 남북이 정전한 지 60년이나 됐지만 한반도 안정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은 아직도 첫걸음도 내디디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정부는 취임 초부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간주하면서 전일 정부의 정책과 성과 및 합의 사항 모두를 백지로 돌려버렸고, ‘골러 다니기만 했던 전임정부와는 달리 북을 굴복시키겠다는 지나친 의욕과 정책은 북한의 거센 반발에 따라 남북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은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비핵개방 3000이 핵심이었고 비핵개방 3000은 본질적으로 북한 선제공격과 개혁개방이 전제되어야만 이행이 가능한 논리 구조이다. 이에 대해 당연히 북한이 정면 거부하고 거세게 비판하면서 남북관계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악화 일로를 걷게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를 이은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말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성공하려면 지난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한다. 지난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대해 굴복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할 때 까지 남북관계를 중단하고 기다리던 편다는 정책으로 일관한다 남북관계만 파탄 낼 뿐 아무런 성과도 없이 5년 임기를 끝냈다.

지금의 악화된 남북관계를 일방의 책임으로만 돌려서, 신뢰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대화와 협상에 나선다면 또 다시 실패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인내심을 갖고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국제사회와 공조하면서 실질적인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남북 간 대화와 운신의 폭을 넓혀나가야 한다.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은 근대에 1927년부터 1950년 까지 소위 국공합작으로 항일운동을 한 시기를 제외하고 무려 16년 동안이나 싸웠고 피해도 원한도 그 만큼 깊었다. 특히 국공내전 기간인 1946년부터 1949년까지 3년 동안에만 양측은 군인만 320만명의 사상자에 민간인 사망자수는 50만명이 넘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양측은 만나 웃으며 원한을 풀기 시작했고 지금은 제3차 국공합작을 거론할 정도로 가까워졌다. 우리 민족도 이제 오랜 대결의 역사를 끝내고 증오를 풀고 화해해서 남북한이 함께 민족중흥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심는 코너입니다.

병원균 옮기는 의사들의 상징 ‘하얀가운’, 위생가운으로 대체해야

일전에 방송에서는 의사의 상징인 하얀고 긴 가운이 사라지고 있다는 보도를 해주었다. 즉 의사들의 상징인 하얀고 긴 가운을 입고다니며 진료도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환자를 대할 때마다 병원균을 옮겨 붙게 하고, 그런 상태로 다른 환자에게 다가가다 보니 질병을 전염시킬 위험이 아주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방송 보도를 듣다 보니 너무나 당연한 건데도 그동안 병원에서 의사선생님들이 하얀 가운을 입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만 여겨 왔

던 우리네 생각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 이미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 병원에서는 이 가운을 없앤 지 오래됐다는 설 명도 나왔다.

병원의 흰 가운은 100년 전 캐나다 의과 의사 조지 알트스트롬이 처음으로 입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가운이 주로 길게 늘어진 소매와 밑단에서 슈퍼박테리아의 일종인 내성 포도상 구균과 황색 포도상구균을 옮겨 붙게 한다는 것이다. 병을 고쳐주는 의사가 그 옷으로 병원균을 옮기는 매개체 역할을 해

은 것이다.

이 때문에 영국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아예 의사의 모든 가운 착용을 금지했고, 우리나라에서도 7년 전 세브란스병원을 시작으로 올해 서울대병원까지 소매가 짧고 길이 없는 정장 형태의 옷이 긴 가운을 대신하고 있다고 들었다.

새로운 의사 복장은 환자를 진료할 때 소매와 밑단이 짧아 상처 부위에 잘 닿지 않도록 돼있고 그 덕분에 긴 가운보다는 짧은 가운이 감염 정도가 낮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병원과 소규모 동네 의원급들은 여전히 길고 흰 가운을 그대로 입고 있다.

아이들이 다쳐서 상처를 치료하려, 혹은 감기나 기타 이유로 병원에 가면 의사선생님들은 긴 가운을 입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세탁한 지 오래됐는지 한눈에 봐도 유난히 지저분해 보이는 가운을 착용한 의사선생님도 본다.

기왕이면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 모든 병원, 모든 의사들이 가운을 없애든지, 아니면 서울대병원처럼 위생 가운으로 대체했으면 한다.

▲이영애·광주시 북구 문흥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汶洙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鎭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이케팅국 227-9600	특저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 치 부 2200-612	체 육 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93	다 지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